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4호 (2024.07.19)

- 이 슈
(산업) 산업 부문의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와 인천시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4호 (2024.07.19)

Cotents

I. 이 슈

(산업) 산업 부문의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와 인천시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복지) 복지부,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시 11

(보건)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상향 적용 11

(고용) 고용노동부, 고용 관련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증진 추진 12

(복지)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서비스 시작 12

(교통)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 하향 조정 관련 시범운영 시작 13

(산업)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방안 발표 13

(교통) 10일부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 가능 14

(산업) 중기부,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 발표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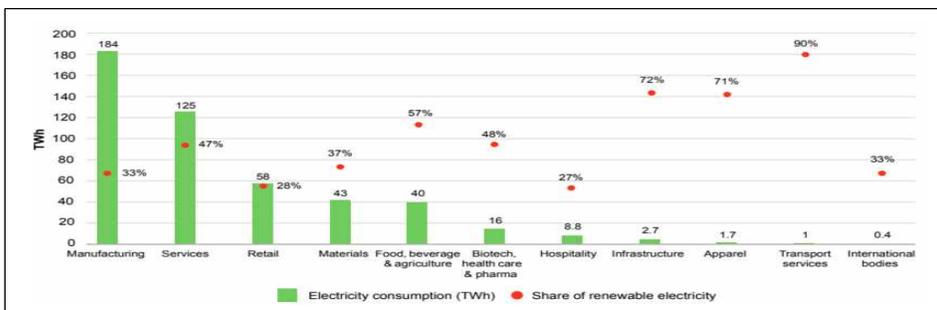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산업 > 산업 부문의 글로벌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와 인천시 시사점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공시제도 변화 #산업전환

- 최근 주요국 정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민간 부문에서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산업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등 탄소중립¹⁾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
 -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주요국은 매년 당사국총회를 통해 각국의 파리협정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
 - '23년 12월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는 UNFCCC의 문서에 '에너지 부문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 in energy systems)'이라는 문구를 포함하는 한편, 각국의 '2035 국가감축목표(NDC)' 달성을 촉구
 -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4년 민간에서도 'RE100'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에너지 사용 부문에서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 RE100이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태양열·풍력·바이오·수력·지열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의 캠페인
 - RE100에는 현재 전 세계 총 433개 기업이 가입하여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20년 SK그룹의 계약사인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을 시작으로 신한금융그룹, 네이버, LG 전자,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등 36개 기업이 포함



* 자료 : The Climate Group(2024.03)

[그림 1] RE100기업들의 산업별 전기 사용량 및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1)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감소 및 흡수량 증대를 통해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제로(Net-Zero)'와 유사한 의미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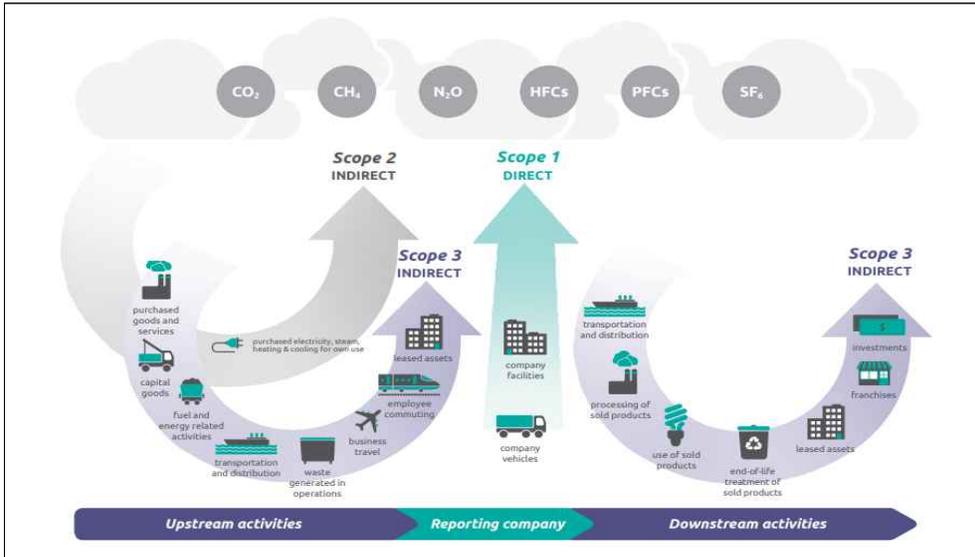
- 한편 '20년 이후 유럽연합(EU)을 시작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 지속가능성 관점의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자 하는 'ESG2)'와 관련한 공시 의무화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가중
 - 국제사회에서는 ESG 공시가 점차 표준화·의무화되는 추세로, '23년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 부문에서는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변화가 더욱 빠르게 체감
 - 유럽의 경우 '06년 UN PRI가 ESG 투자 원칙을 통해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공시 강화를 추진하였으며, '24년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3)'을 시행하며 ESG 공시의 범위 및 세부 사항을 확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4년 3월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SEC 기후공시 규정)'을 승인하며, 미국 증권시장 내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위기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
 - 국내에서는 해외 주요국 ESG 공시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기업의 대응 지원을 위해 글로벌 ESG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기준을 고려한 국내 ESG 공시 기준 마련을 추진
 - 정부 및 금융권을 중심으로 국내기업의 국제 ESG 동향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공시 기준 번역 지원('23.12) △ESG 관련 세미나 개최 △ESG 플랫폼 운영('21.12~) 등을 수행하고, 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ESG 대응 컨설팅 및 정책금융 연계를 지원
 - '26년 이후 국내 대형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내 ESG 공시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계획
 - 주요국의 ESG 공시 기준에 따르면 25~'26년 이후부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해 기업 생산활동에 따른 직접 배출량(Scope1~2) 이외에 생산활동 전반에 걸친 간접 배출량(Scope3)까지 제도 적용의 대상

[표 2] 주요 ESG 공시 기준 의무화 범위 및 시기 비교

구분	국제회계기준재단 (IFRS-ISSB)	유럽연합(EU)	미국(US)	한국
기준 명칭	IFRS S1, S2	ESRS	REC	KSSB
대상	국가별 자발적 기준	CSRD 대상 ('25년 49,000여 사)	상장 대기업(LAF) 및 중견기업(AF)	KOSPI 자산 2조 원 이상 (자산규모별 단계적 공시)
적용 범위	기후 관련 부문 (점차 ESG 전반 확대)	ESG 전반	기후 관련 부문	기후 관련 부문 (점차 ESG 전반 확대)
	Scope 1, 2, 3 (Scope3은 1년간 공시 유예)	Scope 1, 2, 3 (Scope3은 주요 배출원별 배출량 공시)	Scope 1, 2	Scope 1, 2, 3 (Scope3은 3년간 공시 유예)
제3자 검증	각 국가별 적용	의무화	의무화	단계적 의무화
시행 시기	'25년 공시	'25년부터 기업 규모별 단계적 공시	'26년 회계연도(LAF) '28년 회계연도(AF)	'26년 이후

* 자료 : 한국RE100협의체(2024.07)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2) ESG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3가지 핵심 비재무적 성과지표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관의 설립 목적 및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가능.
- 3) 유럽 그린딜 정책의 일부로, 기존에 '비재무적 보고에 대한 지침(NFRD)'가 적용되는 상장기업은 물론이고, EU 기반 기업이나 EU에 자회사를 둔 비EU 기업에까지 확장 적용 예정. 유럽위원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NFRD 적용 상장기업('24 회계연도부터 적용) △매출액 연 4천만 유로 이상/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임직원 수 250명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대기업('25 회계연도부터 적용) △상장 중소기업, 신용기관, 보험회사('26 회계연도에 적용)로 구분하여 동 지침을 적용할 예정.



* 자료 : WBSCD(2011.09)

[그림 3] 기업 가치사슬에 따른 온실가스 프로토콜 배출 범위 및 활동 개관

- (EU)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경우 '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시작으로 '24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 이르기까지 유럽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법안을 시행
 - 「유럽그린딜」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기후 △환경 및 해양 △에너지 △운송 △농업 △금융 및 지역발전 △산업 △연구개발 및 혁신 등 8개 중점분야의 친환경 성장 전략을 담은 정책으로, EU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의 기반
 - EC는 '21년 7월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인 '배출량 '90년 대비 55%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감축 목표 및 환경규제 강화 △탄소가격조정제도(CBAM) △지원책 등 12개 입법안으로 구성된 「Fit for 55」 발표
 - '23년 2월 EC는 유럽의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동 계획에 따른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연료인프라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등의 법안 및 제도를 마련
 - 이 외에도 EC는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⁴⁾」 및 「공급망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⁵⁾」 등 탄소중립을 위해 역내·외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제도화

4) EU 내 유통 제품의 생산-유통-판매-사용-재활용 등 생애주기에 걸친 △사용법 △원자재 △재활용·수리가능성 △환경발자국 등의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공유하는 제도로 '26년부터 적용할 계획.

5) '27년부터 일정 규모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을 초과하는 EU 역내·외 기업에 순차적 적용. 대상 기업은 직·간접 공급망 내 △인권·환경위험 파악 △위험 예방·제거를 위한 방안 마련 △이해관계자와 협력 강화 △기후 전환 계획 수립 및 이행의무 준수 등을 진행 필요.

- **(미국)** 미국은 '21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90)」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다시 강화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LLJA)⁶⁾」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⁷⁾」 등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추진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직전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환경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행
 - '21년 12월에는 '30년까지 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을, '50년까지 연방정부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연방 지속가능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산업 및 일자리 촉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57)」에 서명하고, 전력, 건물, 수송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지속가능성계획(Federal Sustainability Plan)을 발표
 - 또한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21.11)」, 「인플레이션감축법('22.08)」 등을 통해 △전력망 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 공급 △전기차 보급 및 인프라 확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차량 시설투자 및 생산 등의 부문에 보조금, 세액 공제, 투자, 대출 등을 지원

[표 2] IRA의 친환경자동차 세액 공제 수혜를 위한 필수 요건

구분	주요 내용
최종 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 • 2022년부터 즉시 적용
핵심 광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며, 북미에서 재활용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핵심 광물 사용 • '23년 40%, '24년 50%, '25년 60%, '26년 70%, '28년 이후 80% 이상 사용 비율 충족
배터리 소재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에서 제조된 배터리 소재가 일정 비율 이상 충족 • '23년 이후 50% 이상, '29년 이후 100% 충족

* 자료: 탄소중립 정책포털 참고 및 재구성

- EU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탄소중립 전환 정책의 확산에 따라 국내 산업계 및 기업의 부담이 점차 증가
 - 파리 기후 협약 이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선언해 왔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의 에너지 생산 및 산업체계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이행 중
 - 중국은 '20년 5월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강조하였으며,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건설 등 핵심 분야의 녹색 전환과 중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축 계획을 발표·추진
 - 영국은 '21년 10월 기업과 소비자들의 청정에너지 및 녹색기술 적용 제품 사용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및 투자 계획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전략보고서(Net Zero Strategy : Build Back Greener, 넷제로 전략)」을 발표
 - 일본은 '23년 2월 「녹색전환(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을 공표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통한 GX 대응과 성장 지향형 카본 프라이싱(CP)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⁸⁾

6)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7) Inflation Reduction Act.

8)동 기본방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제조업 구조 전환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카본 리사이클 연료 도입 촉진 △CP 실행을

- 이러한 국제적인 탄소중립 전환 트렌드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공급망 재편 △생산비용 증가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요건 변화 등에 영향을 주어 국내 탄소다배출 산업 및 수출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
 - EU의 탄소중립 정책인 △탄소가격조정제도 △디지털 제품여권 △공급망실사지침 등은 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할 때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정에 따른 정보 가공·제공 등 탄소중립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및 활동을 수행하도록 강제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경우 전기차 및 이차전지 제조와 관련하여 법안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등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 핵심 소재들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
 - 이외에도 다수의 탄소중립 추진 국가에서 시행 또는 고려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 확대 △내연 교통수단 판매 금지 및 연비규제 △에너지 효율화 제도 수립 △친환경부문 공공투자 확대 △공시제도 변화 등 직·간접적 정책(제도)은 대기업뿐 아니라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등의 부담으로 작용 가능
-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K-RE100 인증제도를 수립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도 추진 중
 - 우리나라 역시 '20년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제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사회 전반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노력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1년 10월에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8년 대비 40% 수준으로 상향하고, 전환·산업·수송 등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 '22년 3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22년 10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민간 발전사업자 지원제도(RPS) △신재생에너지⁹⁾ 보급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K-RE100) △RE100 펀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
 - 한에공은 '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¹⁰⁾가 시행된 이래 ①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②REC 현물시장 운영 ③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등을 통해 민간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주택·건물 등에 제조·생산·설치하려는 자에게 정부 보조금 및 저리의 용자를 지원
 - 국내 전기 사용자가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PPA △직접PPA △자기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면 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 지난 7월 3일 산업부는 '30년까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 6GW 보급을 목표로 하는 「산단태양광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산업단지의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위한 △태양광 발전사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 △태양광

위한 탄소배출 가격 책정 △탈탄소 관련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할 예정.

9)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10) 50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보급 관련 공공부문 역할 강화 △태양광 보급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추진

-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22년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친환경·에너지자립 산단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을 목표로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경기RE100'을 추진



* 자료 : 경기RE100 홈페이지

[그림 5] 경기RE100 4대 추진과제

- 인천시 관내 중소·중견기업에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기 시작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간 확보 어려움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에너지 관리·인증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전환 관련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는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시행하여 기업활동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있긴 하지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인천시의 경우 지역 여건에 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지역 산업계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 정책을 개발할 필요
 - 기업의 탄소중립 실천에는 △탄소 다배출 여부 △활용가능 재생에너지 시스템 △기업별 제품별 탄소배출량 측정 △기업입지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인천시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별 △입지 유형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맞춤형 재생에너지 보급·활용 방안의 마련이 필요
 -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탄소중립 전환에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비용 부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구축 공간 부족 △기업규모로 인한 장기거래 계약 불가(신용 증빙 불가) △지원사업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담당자를 배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

제조 >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4년 6월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 수출은 전월대비 17.9% 증가한 134.2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¹⁾
 - 6월 반도체 수출은 AI 관련 전방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서버·기업용 메모리 수출의 호조와 메모리 가격의 전년동월비 상승세 유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50.9% 증가
 - HBM, SSD 등 AI 서버 구축에 필요한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파운드리 수주 증가 △IT 수요 회복 등으로 인해 패키징 기업의 수출도 증가세
 - D램과 낸드플래시의 가격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61.5%, 54.4% 상승한 2.1달러, 4.9달러 수준에서 유지됨에 따라, 수출 물량 증가에 따른 수출액 증대 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
 - 반도체는 국내 최대 수출 품목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과 글로벌 수요 확대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기준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5% 증가한 657억 달러를 기록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 : 억\$, \$)

구분	'23.11	'23.12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95.2 (12.9%)	110.3 (21.7%)	93.7 (56.2%)	99.4 (66.7%)	116.7 (35.7%)	99.6 (56.1%)	113.8 (54.5%)	134.2 (50.9%)
D램 고정가격	1.55	1.65	1.80	1.80	1.80	2.10	2.10	2.10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4.09	4.33	4.72	4.90	4.90	4.90	4.90	4.90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4.07.01)' 참고 및 재구성

- **(전국)** 우리나라의 2024년 5월 반도체 생산 및 6월 반도체 수출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며 회복세를 유지했으나, 전반적인 증가세는 다소 약화
 - **(생산지수)** 2024년 5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8.3%, 전년동월대비 16.1% 증가한 127.4로, 생산 경기 호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2024년 들어 생산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 역시 전월대비 10.9%, 전년동월대비 18.1% 상승한 153.9로, 해외

11)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상반기 및 6월 수출입 동향(2024.07.01)'.

수요 증대에 따라 기준치(100)를 크게 웃돌며 생산 호조가 지속

- 2024년 들어 반도체 관련 부문의 재고지수의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반도체산업의 경기는 한동안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
- **(품목별 수출액)**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의 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2024년 6월 기준 총수출액은 전월대비 11.8%, 전년동월대비 45.9% 증가한 약 1,107.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23년 1월 이후 지속 증가
- 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부문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74.9%, 49.0% 상승하여 반도체 관련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두 부문 모두 '24년 2월 이후 급격한 수출 증가세
- 한편 반도체 디바이스의 경우 전월대비 5.5% 증가, 전년동월대비 6.7% 감소한 30.8천만 달러 수준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는 전월대비 10.0% 감소,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며 '24년 들어 수출 경기 회복세가 약화

○ **(인천)** 2024년 5월 인천지역의 반도체 관련 생산 경기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6월 기준 반도체 수출 경기는 회복세가 둔화

- **(생산지수)** 2024년 5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3.3% 감소,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한 138.7로, 출하지수 상승 및 재고지수 하락이 동반되며 반도체 생산 경기의 호조가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4년 6월 인천시 반도체 품목별 수출액 누계는 전월대비 11.8%, 전년동월대비 45.9% 증가한 약 131.9천만 달러로, 회복세가 다소 둔화
- 인천시 반도체 부문별 수출액이 반도체 제조장비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전월대비 감소하며, 반도체 산업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
- 반도체 제조장비의 경우 역시 전월대비 5.6% 증가,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7.2천만 달러로, '23년 6월 이후 등락이 있는 회복세를 유지
- 시스템 반도체 및 반도체 디바이스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반면,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글로벌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각각 40.0%, 1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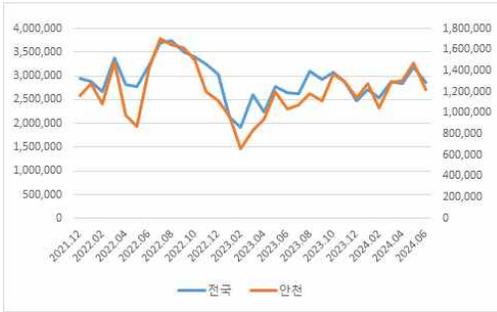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지역	항목	'24.02	'24.03	'24.04 (p)	'24.05 (p)	'23.05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17.6	131.1	117.6	127.4	109.7	8.3	16.1
	반도체 제조업	141.6	159.7	138.8	153.9	130.3	10.9	18.1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10.0	126.3	143.5	138.7	118.6	-3.3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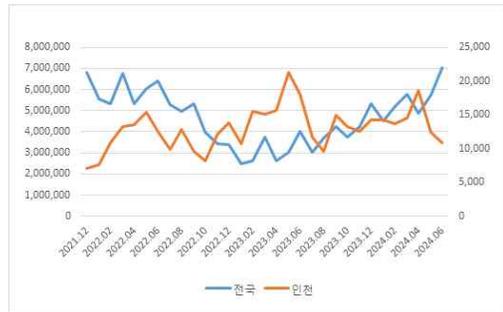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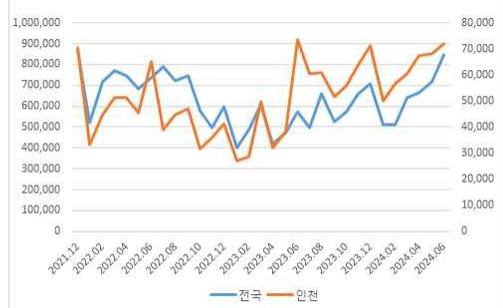
[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4.06)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06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92,971	-6.0	189,519	27.4	96,548	16,562	19.1	17,735	13.9	1,174
자동차	17,245	-31.9	77,755	-3.5	60,509	1,283	1.5	7,125	-15.8	5,842
기계장비	55,662	-1.6	71,851	16.4	16,189	3,983	10.4	4,974	-5.2	991
바이오-의약	7,241	-16.9	6,326	0.9	-915	973	26.0	4,420	9.9	3,446
바이오-화장품	1,590	-9.4	7,521	3.9	5,931	24	-17.5	1,289	-18.5	1,265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복지
복지부, 7월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 복지부는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작
 - 금번 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의 필요성을 인정받거나,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중간(10점) 이상으로 확인된 사람 등을 대상
 -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심리상담 국가자격 보유 전문가가 제공하는 1:1 대면상담 서비스를 연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사업 대상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사업 지침을 참고

구분(8회 기준)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640,000원	-	64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이하						
	120% 초과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이하						
	180% 초과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보건
7월부터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상향 적용


#보건복지부

- 7월부터는 의료서비스의 과소비 방지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해 의료 과소비 사용자에게 본인 부담을 증가시키는 '본인부담 차등화' 도입
 - '본인부담 차등화'는 약 처방일수 및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연 365회를 초과해 이용할 경우, 초과하는 횟수에 대한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골자
 - 외래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는 본인부담 차등화의 예외를 인정
 - 본인부담 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등을 통해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24 모바일앱’을 출시하는 등 고용 관련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추진
 - 고용노동부는 ‘24년 3월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등 각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용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통합 포털 ‘고용24’를 시범운영 중
 - 통합 포털은 △분산된 정부의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 △증빙서류 간소화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강화 등 기존 고용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했으며, ‘24년 9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 금번 출시된 ‘고용24 모바일앱’을 활용하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 포털인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채)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로 이용 가능
 - 모바일앱은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채용정보 서비스 △맞춤 안내 푸시 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가 해외 거주 국민이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7월부터 시작
 - 행안부는 해외 거주 국민이 한국 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
 -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여권을 소유하고 거주지 관할의 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등 우리 공관에 방문하여 휴대폰 번호 및 PIN 번호 등록을 진행한 후, 모바일앱에서 재외국민증 발급을 위한 등록·인증 절차를 수행할 필요
 -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7월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미국 오�클랜드 대사관 분관 △주중국 대사관 △주베트남 대사관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필리핀 대사관 △주상파울루 총영사관 등 7곳에서 시범적으로 발급
 - 행안부는 금번 모바일 재외국민증 시범 발급 이후 8월에는 남아동, 캐나다, 벨기에 등 14곳에서 추가로 발급할 예정이며, 추후 편의성 등을 보완하여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할 계획
 - 금번 도입한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구 영사민원24)’에서 발급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내 재외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

#행정안전부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증가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대여업체* 등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국토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더스윙, (주)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주), (주)올로로, (주)피유엠피, (주)디어코러케이션, (주)알파모빌리티, 닥트쉐어링(주), (주)플라잉, 디근(주)

- 금번 협약 참여 기관은 △최고 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수칙 홍보 강화 등을 집중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최고 속도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0km로 제한하는 시범사업 실시 • 서울·경기·인천·대구 등 10개 대여업체별 시범운영 지역 차이
안전수칙 위반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 • (계도기간) 7월 15일부터 2주, (단속기간) 8월~9월
이용자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방문하여 주 이용층인 10대·20대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 확대 •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및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 제작·배포
안전수칙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광판, 유튜브, KTX 객실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 진행

#기획재정부

- 지난 7월 10일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신규시장 창출 및 EU 배터리법 등 통상규제 대응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리체계 구축·고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

- 정부는 '24년 연내 사용후 배터리 시장 조성·안전관리·산업 육성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
- 또한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사용후 배터리 유통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금번 방안의 로드맵(안)에 따르면 통합 이력관리 시스템은 '27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생원료 인증은 '25년부터, 배터리 성능평가는 '27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한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자등록은 사업 분야(재활용/유통·재사용/재제조)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진행

#국토교통부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
 - * 노상주차장, 지하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을 포함
 - 개정 법령이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으며, 한 달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이 관리 대상
 - *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 법령에 따라 차량이 관할구역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등 비용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
 - 차량이 견인된 이후 24시간이 지나고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이 해당 차량 이동에 대해 14일 이상 공고한 이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매각 또는 폐기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 창출이 용이한 인공지능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고성장 인공지능(AI) 5개 분야 전략 지원 △국내시장 수요 활용 성장 강화 △세계 시장 진출 확대 △전문인력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

구분	주요 내용
고성장 분야 전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디바이스 시에 최적화된 sLLM 스타트업 및 AI반도체 개발 팹리스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 특성별 상용화·제품 검증·스케일업 특화 지원 • AI 융합으로 혁신 성과 창출이 가능한 △제조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 스타트업을 선발해 산업 특성별 공정솔루션 고도화·기술이전 촉진·데이터 수집비용 지원 등 제공
국내시장 수요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의 스마트기기에 스타트업의 AI 기술을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 챌린지’를 현행 노트북 기기에서 생활가전·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로 확대 • AI 기술 수요자와 스타트업의 연계를 통한 AI 융합기술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AI 스타트업 간 구매상담회 개최를 통해 공공구매 촉진
세계 시장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AI 학회 및 전시회 참여 지원 확대, 주요국 AI 관련 인증 및 인허가 획득 지원, 글로벌 펀드 출자 등을 통한 AI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 국제적 법률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 자문 및 기술 보호 정책 보험료 지원
전문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대학원 석·박사를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인력의 국내 취업 연계 • AI 접목 분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AI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협의회 및 포럼 개최 등

참고 자료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4호」, 2024.02.23.
- 탄소중립 정책포털, www.gihoo.or.kr.
- 세계법제정보센터, www.world.moleg.go.kr.
-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www.2050cnc.go.kr.
- The Climate Group, www.there100.org.
- The Climate Group, 「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2024.03.
-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2022.10.26.
- 금융위원회, “「ESG 금융 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2023.04.27.
-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 2023.10.16.
- 금융위원회,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개최”, 2024.04.22.
- 금융위원회,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4.04.23.
- 한국RE100협의체, 「RE100 및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동향과 기업 대응 사례」, 2024.07.08.
- IFRS, www.ifrs.org.
- EC, “The Commission adopts the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2023.07.31.
- WBCSD, 「Corporate Value Chain(Scope 3) Accounting and Reporting Standard」, 2011.09.
- EC, “The Green Deal Industrial Plan: putting Europe's net-zero industry in the lead”, 2023.02.01.
- EC, “Net-Zero Industry Act makes the EU the home of clean tech manufacturing and green jobs”, 2024.05.27.
- KOTRA 해외시장뉴스, “EU의 핵심원자재법 살펴보기”, 2023.04.06.
- 한국무역협회,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이사회 승인, 발효 예정」, 통상이슈브리프, 2024.05.24.
- KDI 경제정보센터, “탄소중립 정책…선택인가, 필수인가?”, 2022.
-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Catalyzing Clean Energy Industries and Jobs Through Federal Sustainability”, 2021.12.08.
- 한국은행,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2021.05.02.
- 환경부, 「2050 탄소중립 교육 참고자료집」, 2022.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탄소중립 정책연구」, 2022.06.
- 한국에너지공단, www.energy.or.kr.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제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의 산실로”, 2024.07.03.
- 경기RE100 홈페이지, www.gg.go.kr/ggre100.
- 국토교통부, “새만금 국가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최초 지정”, 2022.07.07.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보건복지부, 2024.07.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과잉의료 막는다...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보건복지부, 2024.07.0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고용노동부, 2024.07.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해외에서도 본인 확인...'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도입", 행정안전부, 2024.07.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동킥보드 속도 줄인다...전국 주요도시 '20km 제한' 시범운영", 행정안전부, 2024.07.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용후 배터리' 산업 키운다...정부, 육성 법안 연내 제정 추진", 기획재정부, 2024.07.10.
- 관계부처 합동,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 2024.07.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10일부터", 국토교통부, 2024.07.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초격차 AI 스타트업,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07.10.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4호(2024.07.19)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7월 19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